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6. 9. 20.

발 의 자: 김관영 · 김중로 · 김동철
이태규 · 박주선 · 이용호
장정숙 · 이동섭 · 김광수
최경환(국) · 우상호 · 설 훈
박병석 · 김병기 · 문희상
김경협 · 강창일 · 이철희
이종걸 · 진 영 · 김정재
정태옥 · 민경욱 · 김성원
성일종 · 이만희 · 권석창
오신환 · 강석진 · 김명연
의원(30인)

수정이유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양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함.

수정주요내용

가. 주문 3의 내용을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함.

나. 주문 4 및 5를 각각 주문 5 및 6으로 한다.

다. 주문 4를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로 신설한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지난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약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

을 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지난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약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지난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약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 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 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